

일반 논문

김정은 시대 '새 시대 농촌강령'의 등장 배경 및 내용*

송현진 (이화여대)

국문요약

본 연구는 2021년 김정은 정권이 채택한 '새 시대 농촌강령'이 추진된 배경과 내용, 특징을 『로동신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새로운 농촌강령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전망은 어떠한지를 밝히고자 했다. 농촌 저발전에 따른 농민들의 소외감과 불만, 대내외적 위기에 따른 농업 생산성 정체와 하락이 새로운 농촌강령을 채택한 배경이다. 농촌강령의 내용은 농민을 '지식형 근로자'로 세워 농촌혁명의 주인으로 만드는 것, 과학기술에 기반한 농업생산성 증대와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 농촌의 문명화이다. '사회주의 농촌테제'와의 비교를 통해 발견한 특징은 첫째, 이전 시대의 '농민의 노동계급화'라는 농민관에서 '지식형 근로자'로 변화한 점이다. 둘째, 기존의 노동력 중심에서 과학기술 중심의 농업생산성 향상으로 변화한 것이다. 셋째, 도시의 농촌 지원 차원을 넘어, 도농 간 균등한 발전을 이루려고 한다는 점이다. '새 시대 농촌강령'은 북한의 '사회주의의 전면적, 균형적 발전'을 지향하고 있으며, 현재의 북한 경제 상황으로 볼 때 목표한 성과를 내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주제어: 김정은 시대, 새 시대 농촌강령, 지식형 근로자, 농촌의 문명화, 농업생산성 증대

DOI URL: <https://doi.org/10.35369/jpus.14.2.202212.117>

* 이 연구는 롯데장학재단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I. 서론

북한은 1946년 토지개혁, 1958년 농업협동화의 완료를 선언하고, 1964년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이하 사회주의 농촌테제)를 선포한 후 이에 기반해 농촌정책을 펼쳐왔다. 사회주의 농촌테제는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낙후한 농촌문제를 물질적, 기술적, 문화적으로 해결할 방안으로 제시되었다.¹⁾ 농업협동화 완료 후 북한은 사회주의 공업국가로의 이행을 과업으로 설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고도성장을 해 온 공업과 낙후한 농업 사이의 생산력 격차가 문제로 드러난 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농업협동조합을 통합했으며, 소련의 『협동조합에 관하여』를 모방해 기술·문화혁명을 추진했다.²⁾ 기계화·수리화·전기화 등 기술혁명을 통해 낙후한 생산력을 극복하고, 농촌의 부족한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또 문화혁명을 통해 농민들을 높은 지식수준과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시켜 생산력을 발전시키고자 했다. 이처럼 북한의 사회주의 농촌건설은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를 통해 사회주의 단계로 들어섰으며, 사회주의 농촌테제를 통해 성립해 나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농민에 대한 사상·기술·문화혁명이라는 3대혁명을 통해 사회주의 농촌을 건설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추진해왔다.

김정은 정권은 집권 초부터 인민생활 향상을 국가목표로 제시하고 주민들의 먹는 문제 해결에 주력해왔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여러 차례에

1) 정진아, 「북한 사회주의 농촌테제의 등장 배경」 『사학연구』 제123호 (2016), 212쪽.

2) 『협동조합에 관하여』는 1923년 레닌이 저술하였으며, 그는 사회주의 단계에서 농민에 대한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특히 강조했다.

결쳐 농업 분야의 개혁정책을 제시해왔다. 농업은 김정은 집권 이후 주요 경제 과업으로 꼽혔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협동농장을 비롯한 농업 관련 시설을 자주 들르면서 농업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대표적인 농업개혁이 바로 포전담당책임제이며, 협동농장의 경작 단위를 세분화해 초과 달성한 농산물을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농가별 인센티브제를 통해 농업생산력을 높이려는 의도였다. 개혁정책과 함께 김정은 정권은 농업의 과학화와 현대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북한은 해마다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응할 농업 기반시설도 취약한 실정이다. 북한 매체들은 과학농사를 강조하며 농민들을 독려하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은 없어 보인다. 결국 북한의 농업 생산성 저하는 또다시 농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 식량부족과 도시와 농촌 간의 불균등 발전을 인정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며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2021년 SDGs VNR보고서에서 북한이 농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식량의 자급자족 실현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식량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생산 감소의 주된 원인은 자연재해와 낮은 회복탄력성, 농자재 부족, 낮은 기계화 수준 때문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식량 자급자족 실현과 농업 과학기술 발전을 우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³⁾ 또한 산업, 농업, 보건, 교육과 인프라 분야에서 도시와 농촌 간에 격차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도농 격차의 감소를 위해 북한 당국은 앞으로 농촌 지원을 더 강화하고, 도시의 공장과 기업소는 농촌 협동농장을 더욱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에너지 공급 보장, 환경·자재·연료 공급의 개선, 농업생산 증대 보장을 통해 농촌 인구의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 이행에 관한 자발적 국가 검토 보고서』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2021), 15~17쪽.

생활 수준과 농촌 경제의 물질적 기술적 기초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실효성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하고 있다.⁴⁾

이런 문제의식의 일환에서 북한은 2021년 12월 말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2일 차 회의에서는 오로지 농촌발전 의제 하나만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보고한 “우리식 사회주의농촌발전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라는 ‘새 시대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이하 새 시대 농촌강령)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강령 이전까지는 1964년 ‘사회주의 농촌테제’가 유일한 북한의 농촌강령이었다. 북한은 2022년 9월 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사회주의농촌발전법’을 채택해 ‘새 시대 농촌강령’을 법적으로 담보하고 있다. 그렇다면 집권 10년을 넘긴 김정은 정권이 ‘사회주의 농촌테제’를 두고 ‘새 시대 농촌강령’을 채택한 배경은 무엇일까? 새로운 강령을 내세워 김정은 정권이 얻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김일성 시대 ‘사회주의 농촌테제’ 및 김정은 시대 기존 농촌정책과는 어떤 차이를 지니고 있을까? 국제사회에 북한의 상황과 문제를 공개하고, ‘새 시대 농촌강령’을 통해 그 대안을 제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김정은 시대 ‘새 시대 농촌강령’의 추진 배경과 내용, 그 특징을 탐색하고자 한다.

김정은 시대 농촌에 관한 연구는 주로 농업정책을 다루고 있다. 먼저 김정은 집권 후 시행된 농업 분야의 개혁조치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농업정책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과제와 전망을 분석한 연구들이다.⁵⁾ 이 연구

4) 위의 글, 35쪽.

5) 임상철, 「김정은 시대의 북한농업정책, 그 과제와 전망」 『북한연구학회보』 제17권 제2호 (2013); 김영훈, 「김정은 정권 5년 북한농업 평가와 과제」 『KERI 북한농업동향』 제18권 1호 (2016); 최현아·김관호, 「김정은 시대 북한 농업정책과 교류협력 방향」 『현대북한연구』 제24권 2호 (2021).

들은 김정은 정권이 인민생활향상을 목표로 농업의 중요성 속에서 농업 정책을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적 의의를 지닌다. 다음으로 농업정책 중 특정 정책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도 있다. 북한의 농업개발구 선정 원인과 성공 요인을 분석한 연구,⁶⁾ 북한 유기농업 정책의 발전과정과 특징을 다룬 연구가 있다.⁷⁾ 또한 김정은 시대의 주요 농업정책으로 포전담당제의 중요한 역할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⁸⁾ 이 연구들은 북한 농업생산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정 정책의 특징을 분석하고, 남북한 농업교류협력의 중요성도 함께 제시하고 있어 유의미한 성과가 있다.

다음으로 김정은 정권의 신년사에서 제시한 농업정책과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농업분야의 중심 목표와 정책을 다룬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⁹⁾ 또한 최근 북한의 식량 및 농업 동향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¹⁰⁾ 코로나19 사태 및 기상재해에 따른 북한 식량수급 동향과 전망을 밝히고 있는 연구가 있다.¹¹⁾ 무엇보다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농촌강령을 반영한 연구에서는 농촌 기반의 도시주의적 분석을 하고 있어 현재 북한의 도농

6) 이유진, 「북한의 농업개발구 선정 원인과 성공 요인 분석」 『북한연구학회보』 제19권 제1호 (2013).

7) 정은미, 「식량주권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유기농업」 『현대북한연구』 제16권 1호 (2013); 윤무근, 「북한 유기농업의 발전과정과 특징에 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24권 제1호 (2020).

8) 정정현, 「북한의 협동농장 생산체제에 있어 분조관리제의 변화와 농업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협동조합경영연구』 제48집 (2018).

9) 한승호·김관호, 「북한 신년사(2013-2017)를 통해 본 김정은 시대의 농축수산업 분석」 『평화학연구』 제18권 1호 (2017); 양문수, 「북한 8차 당대회가 북한경제 및 농업에 미치는 영향」 『KERI 북한농업동향』 제22권 제4호 (2021).

10) 김영훈, 「최근 북한 식량·농업의 동향과 전망」 『KERI 북한농업동향』 제23권 3호 (2021).

11) 최용호, 「코로나19 사태와 북한 식량수급 동향과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제195호 (2020); 김영훈·이슬아, 「코로나-19 및 기상재해와 2020년 북한의 식량·농업」 『KERI 북한농업동향』 제22권 2호 (2020).

격차라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¹²⁾ 또한 임수호는 새로운 농촌강령이 농업개혁 과정에서 사문화된 김일성의 ‘사회주의 농촌테제’를 부활시킨 것으로, 경제관리 재집권화 추세와 현물에 대한 국가 통제권 강화의 일환이라고 평가하고 있다.¹³⁾

이처럼 김정은 시대 농촌연구는 농업 생산성을 중심으로 총체적 분석과 특정 주제별 정책을 집중해서 다루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김정은 정권이 인민생활향상을 목표로 내세우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업의 중요성과 함께 정책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어 연구적 의의를 지닌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2021년 연말에 진행된 제8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발표한 “우리식 사회주의농촌발전의 위대한 새시대를 열어나가자”라는 최근 정책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김정은 시대의 ‘새 시대 농촌강령’의 등장 배경 및 내용을 탐색하고, ‘사회주의 농촌테제’와의 비교를 통해 그 특징을 밝히는 것이다. 결국 김정은 정권이 ‘새 시대 농촌강령’을 통해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밝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또한 ‘새 시대 농촌강령’의 전망을 살펴보기 위해 중국이도·농간 소득격차 해소와 ‘3농’ 문제 해결을 위해 2006년 1월부터 추진한 ‘사회주의 신농촌건설’ 정책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김정은 시대 ‘새 시대 농촌강령’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조선노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을 1차 자료로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북한 농촌정책을 다룬 국내의 2차 자료를 함께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발표된 ‘새 시대 농촌강령’을 중심으로 북한의 농촌정책 변화와 김정은 정권이 지향하는 농촌정책과 전망을 밝히는 데 의의를 지닌다.

12) 황진태,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농촌테제에 대한 도시주의적 분석」 『Online Series』 CO 22-02 (2022).

13) 임수호, 「북한의 새로운 농촌강령과 농촌테제의 부활」 『이슈프리프』 제382호 (2022).

II. 이론적 배경

1. 북한의 '사회주의 농촌테제'와 농촌정책 변화

북한에서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의 이행은 1946년 토지개혁과 중요산업의 국유화 조치로 출발했다. 이를 통해 봉건적 소유관계를 청산하고 사회주의 이행을 위한 조건을 마련했다.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농업협동화였으며, 북한은 전쟁 후 농업과 개인상공업의 협동화를 추진했다. 북한이 농업협동화를 급속히 진행한 이유는 농촌 노동력을 도시로 이전시키고, 양곡을 수매하여 도시노동자의 배급 식량을 확보해 급진적인 사회주의 공업화를 추구했기 때문이다. 전쟁으로 파괴된 농업생산력을 복구하고 공업의 발전을 뒷받침해 준다는 목적을 지녔으며, 중공업 중심의 사회주의 공업화를 이루어 자립적 경제구조를 수립하고자 했다. 이는 구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에서 산업화를 위한 농업 수탈, 즉 '사회주의 원시축적'이라는 원칙이 북한에서도 적용된 것이다.¹⁴⁾ 북한의 토지개혁은 기본 성격이 중국과 동일했으며, 농업협동화는 중국의 인민공사와 유사했다. 북한과 중국의 집단화는 급격히 위로부터 이루어졌지만, 북한의 집단화 속도는 중국보다 빠르고 집단화 방식은 중국에 비해 덜 대중적이었다.¹⁵⁾ 북한의 농업집단화는 초기에는 생산력 발전을 촉진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농민들의 능동적, 창조적인 의욕을 결여시켜 생산력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¹⁶⁾

14) 조수룡, 「자발과 강제 사이에서: 1950년대 북한 농업협동화의 과정과 성격」 『통일과 평화』 제13집 2호 (2021), 171쪽.

15) 이일영, 「사회주의 집단농업의 구조와 제도개혁에 관한 비교 연구: 소련·중국·북한을 중심으로」 『농촌경제』 제17집 제4호 (1994), 113-115쪽.

북한 정권은 농업협동화 이후 생산력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농민들의 집단주의적 생활양식이 정착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1958년을 정점으로 생산력은 정체되고 농민들은 일탈을 일삼으며 사회주의 건설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았다.¹⁷⁾ 김일성 정권은 농업협동화에 머무르지 않고 농민들을 사회주의로 추동해야 농민들 스스로가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체감하고 혁명적 열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북한은 1961년 경제발전 7개년계획을 추진하면서 사회주의 공업국가를 건설하고 자립적 민족경제를 달성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농업과 공업의 생산력 격차를 극복할 것을 선결과제로 정하고, 자립적인 공업과 농업체계를 동시에 수립하고자 했다.¹⁸⁾ 하지만 1964년 인민 경제생활 향상과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고자 했던 경제계획의 목표는 달성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농업생산력 또한 향상되지 못했다. 이에 김일성 정권은 1964년 2월 '사회주의 농촌테제'를 발표했다. '사회주의 농촌테제'는 농촌 현실과 사회주의 이상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고, 농민을 추동하여 농업생산력을 공업 수준으로 향상시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자 채택된 것이다.

김일성 정권은 농민들이 사회주의 건설에 소극적인 원인이 소자산계급으로서의 계급적 속성이라고 판단하고, '사회주의 농촌테제'를 선포해 농촌문제 해결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사상혁명을 중심으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추진한다. 둘째, 농민에 대한 노동계급의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도움,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강화한다. 셋째, 농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공업 수준으로 올리고, 협동조합적 소유

16) 김영희, 「중국과 북한의 농업집단화에 대한 비교 고찰」 『한중인문학연구』 제35집 (2012), 439~440쪽.

17) 이것은 급속한 공업 생산력의 발전과 노동자들의 열정과 비교된 현상이었다. 정진아, 「북한 사회주의 농촌테제의 등장 배경」, 229~230쪽.

18)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4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1961년 9월 11일)」 『김일성저작집 1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214쪽.

를 전 인민적 소유로 한다는 원칙이었다.¹⁹⁾ 이를 통해 도시와 농촌의 차이, 노동자와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고 농민을 사회주의 근로자로 만들어 전 사회의 '노동계급화'를 실현해 사회주의 건설과 자립경제를 건설하고자 한 것이다.²⁰⁾ 이후 북한은 김일성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면서 주체사상을 체제이념으로 구축했다. 농업에서도 주체사상을 결합해 '주체농법'을 도입했으며, 농업기술지도방식을 넘어 협동농장의 생산활동과 농업지도관리에도 관철됐다.²¹⁾ 하지만 '주체농법'의 효과는 뚜렷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생산성 하락을 초래하기도 했다.

김일성 주석은 1994년 2월 '사회주의 농촌테제' 발표 30주년을 기념하면서 『사회주의농촌테제의 기치 높이 농촌문제의 중국적 해결을 위하여』라는 노작을 발표했다. 1964년 사회주의 농촌테제에서 제기한 3대 혁명이 획기적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하면서, 농촌문제의 중국적 해결을 위해 3대 혁명을 "한계단 더 심화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²²⁾ 이후 북한은 김일성 사망과 구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 자연재해를 맞아 심각한 식량난에 직면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3년 5월 31일 담화에서 '사회주의 농촌테제'가 북한의 위대한 농촌강령이라고 전제한 후 농업에 대한 지도관리 개선을 제시했다. 김정일 정권이 2002년부터 2004년에 식량 수매량 축소와 수매가 인상, 분조관리제 중심의 협동농장 운영, 사정지 확대, 포전담당제 시범 실시 등 매우 진전된 농업개혁을 추진했던 점을 보면, 이 담화는 농업개혁을 농촌테제의 이룸

19) 정진아, 「북한 사회주의 농촌테제의 등장 배경」, 235~238쪽.

20) 김일성,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1964년 2월 25일)」 『김일성 저작집 1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197~217쪽.

21) 김영훈 외, 「북한의 농업부문 개혁조치 분석과 전망(1996~20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3), 23쪽.

22) 김일성, 『사회주의농촌테제의 기치높이 농촌문제의 중국적 해결을 위하여 (1994년 2월 24일)』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10쪽.

으로 정당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김정일 정권은 ‘사회주의 농촌테제’ 관철 수단인 3대 혁명 중 기술혁명만 강조하고 사상혁명, 문화혁명은 언급하지 않았다.²³⁾ 이는 극심한 식량문제의 대안으로 식량 생산에 중점을 둔 개혁 중심 농촌정책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북한의 3대 정권으로 출범한 김정은 위원장은 2014년 2월 ‘사회주의 농촌테제’ 발표 50주년을 맞아 『사회주의농촌테제의 기치를 높이 들고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라는 노작을 발표했다. 농촌에서의 3대 혁명에 대해 김일성 시대의 ‘사회주의 농촌테제’를 계승했지만, 글 제목에 ‘농업생산’을 포함했듯이 생산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농법을 소개하는 내용이 노작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결국 3대 혁명 중 기술혁명에 집중하면서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에 대해서는 “성과적으로 추진”되었다며 짧게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²⁴⁾ 또한 김일성 시대의 ‘사회주의 농촌테제’와 달리 농촌에서의 주요 전략이었던 ‘농촌의 도시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가 훨씬 줄어들었”다며,²⁵⁾ 농촌 문제에 대한 도시의 지원 역할에 대해서도 논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김일성 시대 ‘사회주의 농촌테제’에서 3대 혁명 중에 기술혁명만을 강조하고,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축소하여 계승했다.²⁶⁾ 또한 농촌문제에 대한 도시의 역할을 현저히 축소했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김정일의 사망으로 집권한 김정은 위원장이 제대로 후계체제를 구축하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의 3대 지도자가 되면서 권력 기반이 취약했다는 점이 작용했을 것이다. 고난의 행군 이후 경제력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의 핵심

23) 임수호, 「북한의 새로운 농촌강령과 농촌테제의 부활」, 2쪽.

24) 김정은, 『사회주의농촌테제의 기치를 높이 들고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2014년 2월 6일)』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4), 2쪽.

25) 위의 책, 2쪽.

26) 황진태,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농촌테제에 대한 도시주의적 분석」, 4쪽.

협 결과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까지 맞물리면서 인민생존의 최소 요건인 식량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맥락과 맞물려 김정은 정권은 식량 증산을 위한 다양한 농업 개혁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2. 중국의 '사회주의 신농촌건설'

중국의 농업인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으며, 농업은 중국경제의 중심축인 동시에 경제발전의 문제이기도 하다. 중국경제는 1978년부터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한 후 현재까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공업화 과정에서 도·농간 불균등 발전전략은 9억 명에 달하는 중국 농민들을 열악한 생활로 내몰았다. 결국 중국의 농업·농촌·농민(3농) 문제는 가장 중요한 국가적 해결과제로 떠올랐으며, 2005년 열린 중국 제 16기 5중 대회에서 도·농간 소득격차 해소와 '3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운동'(이하 신농촌건설)을 제의하였다. 중국은 2006년 1월부터 '신농촌건설'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²⁷⁾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이란 마을단위의 종합개발방식으로, 마을단위 주민참여를 기본으로 국가와 지방자치제의 재정지원을 확충하고, 공업도시 등 사회 각층을 총동원하여 도·농간 격차를 점진적으로 해결한다는 전략이다.

중국이 '신농촌건설'을 추진한 배경은 개혁·개방 추진 후 농촌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한 세 가지 정책들이²⁸⁾ 중국의 '3농' 문제를 근본적으로

²⁷⁾ 윤기관·왕하, 「중국 신농촌건설정책 추진과 한-중FTA체결 이후 한국농업 미래전략」 『한국무역학회 학술대회』 제4호 (2008), 64쪽.

²⁸⁾ 세 가지 정책이란 ① 1978년부터 추진한 승포책임제의 개혁으로 권리를 농가에 대폭 이양한 정책, ② 2000년부터 전개한 농촌 세금개혁, ③ 2006년부터 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식량생산이 여전히 정체 상태였고, 2000년 이후 농민 평균수입에 대한 도시주민 평균수입 비율이 3배를 넘어서는 등 도·농간 소득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었다.²⁹⁾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지도부는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를 점차 축소하여 농민과 도시주민 모두가 경제발전의 성과를 공평하게 수혜하는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할 목표로 ‘신농촌건설’을 추진한 것이다. ‘신농촌건설’의 주요 방향은 농업 생산력 증대, 생활개선, 문명적 농촌의 건설, 농촌 면모의 일신, 농촌기초단계 민주화 등이다. 결국 도·농간 격차를 해소해 ‘조화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³⁰⁾

주요 내용은 도·농간 경제발전의 통합적 추진, 현대적 농업건설, 농촌공공사업 추진, 농민수입의 증대 등이다. ‘신농촌건설’의 장기적 목표는 향후 10~15년 동안 사회경제의 자유로운 발전, 인프라시설 기능 완비,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거환경, 민주주의식이 강화된 신농촌으로 전국의 농촌을 건설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농촌을 중산층 사회로 진입시킨다는 목표이다. 구체적인 정책방향은 첫째, ‘현대화’로 농촌 인프라 건설 등을 통해 낙후된 생산성을 향상시켜 농민들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농촌경제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시장화’로 토지이용의 시장화, 노동력 이용의 시장화, 자본조달의 시장화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셋째, ‘공업화’로 농촌에 공업 부문을 발전시켜 농업의 소득을 증대시킨다는 전략이다. 넷째, ‘도시화’로 농촌지역에 중소도시를 육성하여 도시화 비율을 높

도한 농업세 등 농가세금을 전부 폐지하여 농민의 부담을 감소한 정책이다. 위의 글, 68쪽.

²⁹⁾ 1980년대 전반까지 농민 평균수입에 대한 도시주민 평균수입은 2배를 조금 넘기는 수준이었다. 조준현, 「중국의 농촌경제와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한중미래연구』 제4호 (2015), 35쪽.

³⁰⁾ 김태근, 「중국, 신농촌건설을 2006년도 1호문건으로 채택」 『세계농업』 제66권 (2006), 4쪽.

임으로써 도·농간의 격차를 줄인다는 정책이다.³¹⁾

다음으로 중국 중앙정부는 '신농촌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5대 원칙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경제 건설을 중심으로 농민소득 성장을 기초로 실행해야만 현재의 농촌을 전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원칙이다. 두 번째로는 농촌의 기본적인 경영체제인 가족농업경영을 유지한다는 원칙이다. 세 번째는 낙후된 농촌을 변화시키려면 농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우선 실현한다는 원칙이다. 네 번째는 과학적이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한다는 원칙이다. 다섯째는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시공업 부문의 기업과 주민을 동원해 최대한 농촌발전을 위해 공헌하도록 한다는 원칙이다.³²⁾ 또한 '신농촌건설' 추진 10년을 평가한 연구에 따르면, 먼저 2001년 2,366元이던 농민소득은 2011년 6,977元으로 10년 동안 약 2.9배 증가하였다. 하지만 도시주민의 소득은 같은 시기 약 3.2배³³⁾ 성장해 농민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여,³⁴⁾ 도·농 간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신농촌건설'이 실시되면서 농촌마을 진입로 등이 시멘트로 포장되고, 주택이 개량되는 등 농촌환경이 많이 개선됐다고 평가하고 있다.³⁵⁾ 지역에 따라서는 농촌개발을 통해 새로운 작목을 도입하고 농산물 가공·판매와 농촌관광 등을 추진해 농가소득을 향상시킨 지역도 다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중국의 농촌지역이 워낙 넓고 인구가 많아 농민의 빈곤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런 현실이 '신농촌건설'을 추진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논하고 있다.

31) 조준현, 「중국의 농촌경제와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38~39쪽.

32) 김태곤, 「중국, 신농촌건설을 2006년도 1호문건으로 채택」, 4~5쪽.

33) 2001년 6,860元이던 도시주민의 소득은 2011년 21,810元으로 10년 동안 약 3.2배 증가하였다.

34) 조준현, 「중국의 농촌경제와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43~46쪽.

35) 윤의곤·허국동·이병오, 「중국의 신농촌건설과 빈곤퇴치 문제」 『강원 농업생명환경연구』 제28권 제3호 (2016), 1쪽.

Ⅲ. ‘새 시대 농촌강령’의 등장 배경

북한은 2021년 12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보고한 “우리식 사회주의농촌발전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라는 ‘새 시대 농촌강령’을 채택했다. 집권 10년을 맞은 현시기에 지금까지 북한 유일의 농촌강령이었던 ‘사회주의 농촌테제’를 대신해 ‘새 시대 농촌강령’을 추진한 배경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도시와 농촌의 격차 심화에 따른 농민의 소외감과 불만 고조

전통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의 도시와 농촌 관계는 농업생산물의 원시축적에 기인한 공업의 성장이라는 불균형적 착취관계를 전제한다. 도·농간 불균등한 수탈 관계는 농산물의 저가 구매와 고가 공산품 간의 교환으로 농업잉여를 공업 부문으로 이전시키는 관계에서 출발한다. 북한도 전체 농경지의 90%를 차지하는 협동농장의 생산물을 도시인구의 약 70%에게 공급해왔다. 다만 북한은 초집중적 당-국가체제를 수립함으로써 농촌에서 도시로의 농업잉여를 착취하는 대신 비료, 농기구, 영농기술, 노동력 지원 등을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양시켜 왔다. 그리고 농촌의 각 군(郡)에서 교육과 보건의료 등의 생활편의시설을 배정하여 도시·농촌 간의 균형을 도모하였다. 하지만 시장화가 진행되며 도시와 농촌의 상호보완 관계가 깨지면서 도시와 농촌 간 생활 수준, 지역발전, 문화적 혜택 등에서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³⁶⁾

³⁶⁾ 박희진, 「북한 도시-농촌의 연접공간과 파생되는 계층들」 『문화와 정치』 제7권 3호 (2020), 212쪽.

북한에서 농민들은 협동농장에 출근해 집단농업을 하고, 남은 시간을 쪼개 개인 텃밭을 일구거나 야산을 개간하며 식량생산을 위해 희생해 왔지만, 생계유지조차 되지 않으면서 불만과 저항이 고조되고 있다. 불만이 쌓인 농민들은 태업과 수매 거부, 식량 비축, 협동농장 재산의 사적 전유, 조기 수확, 근무지 이탈, 허위 보고와 정보의 왜곡 등 다양한 저항을 통해 최대한 개인의 이득을 챙기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다.³⁷⁾ 이에 북한 당국은 분배제도 등의 농촌정책을 조정하여 물질적인 보상을 늘리거나, 농민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농촌의 사경제 부문의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유인정책을 펼쳐왔다. 북한 당국은 이러한 농촌정책을 통해 농민의 불만과 저항을 누그러뜨리고 그들의 노동의욕을 높여 농업생산력 향상을 추구해왔다.

김정은 정권 이후에도 농민들의 삶은 여전히 고달프다. 남북하나재단 조사에 따르면 북한에서 가장 못 사는 직업 순위는 협동농장원이라고 한다. 특히 산간지대 협동농장은 여성노동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농민들은 군대, 대학, 결혼, 직장배치 등의 기회가 생기면 농촌으로부터의 탈출을 시도한다.³⁸⁾ 현재 북한 사회는 시장화의 진전에 따른 소득분화로 빈부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다.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평양과 비평양, 지방 내에서도 북·중 접경지역과 내륙지역, 도시와 농촌 간의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국경과 떨어져 있어 외화벌이할 수 없는 내륙지역은 주로 곡창지대로 이루어져 농촌지역의 상대적 빈곤감과 농민들의 소외감, 불만은 고조되고 있다.³⁹⁾

37) 정은미, 「농민의 저항과 북한 농업정책의 변화: 1960년대와 1990년대의 유인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농촌사회』 제18집 1호 (2008), 229쪽.

38) 박희진, 「북한 도시-농촌의 연결공간과 파생되는 계층들」, 231~232쪽.

39) 채수란, 「김정은 시대 비평양지역 가계경제활동에 대한 연구: 북한이탈주민 조사를 바탕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24권 제2호 (2020), 66쪽.

김정은 위원장은 2014년 김일성의 농촌테제 발표 50주년을 기념하여 발표한 노작에서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가 훨씬 줄어들었”다며⁴⁰⁾ 도시와 농촌 간 격차의 심각성을 인정하거나 농촌문제에 대한 도시의 역할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집권 초기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식량 문제에 집중해 생산을 증대하면, 도시주민과 농민의 생활문제까지 자연스럽게 해결하면서 안정적 통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식량문제뿐 아니라 도농 간 불균등 발전이라는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2019년부터 ‘사회주의 전면적, 균형적 발전’을 강조하며 국가발전구상의 변화를 밝혀 왔다. 또한 2021년 1월에 열린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를 ‘우리 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행로’에서 이정표가 될 대회라고 강조하였다.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은 균형적·동시적 발전을 뜻하며, 이는 정치, 국방, 경제 등 모든 부문의 균등한 발전과 함께 지방과 도시 경제의 균형적·동시적 발전을 의미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경제발전, 특히 도·농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농촌발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⁴¹⁾

더 나아가 김정은 위원장은 2022년 1월 조선농업근로자동맹에 보낸 서한에서 문제의 절박함을 언급하기에 이르렀다. 김정은이 직접 “농촌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있는 농민들”이 늘어가고, “농촌에서 세대교체가 일어나 농민들의 의식과 환경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⁴²⁾ 지적한 것을 보면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한 농민 문제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북한은 2021년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이행 상황을 보고한 자

40) 김정은, 『사회주의농촌테제의 기치를 높이 들고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2014년 2월 6일)』, 2쪽.

41) 최은주, 「김정은 시대 북한의 장기 발전 구상의 등장 의미와 시사점」 『한반도 미래연구』 제7호 (2022), 221~224쪽.

42) 『로동신문』 2022년 1월 30일.

발적 국가보고서(VNR)에서 도시와 농촌 간의 불균등 발전을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이례적인 김정은 정권의 행보를 볼 때, 평양을 비롯한 주요 도시들의 발전에 비해 농촌의 저발전에 대한 농민들의 상대적 빈곤감과 불만이 고조되었음을 방증한다.⁴³⁾ 농촌 저발전에 따른 농민들의 불만은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적 일탈과 저항으로 표출되고 있어 농민들의 불만을 잠재울 새로운 농촌정책이 필요했다고 여겨진다. 결국 '우리 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산업 간, 지역 간 차이를 점차 없애나가 모든 인민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새 시대 농촌강령'을 제시한 것이다.

2. 대내외적 위기에 따른 농업 생산성 정체와 하락

김정은 정권은 집권 이후 인민생활 향상을 목표로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매진해왔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며 농업생산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식량 증산은 해방 후 현재까지 북한 농업의 최대 목표이다. 특히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지속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은 식량 생산 증진과 안정적 공급으로 주민들의 먹는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이다. 북한 사회에서 식량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이면서 안보 문제이다. 북한 경제 활성화에 있어 농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지지에 기반한 안정적인 정권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로 조성된 국제적 고립과 군사적인 긴장 고조는 군량미 비축 등의 군사적 수요의 증가를 압박하고 있다.⁴⁴⁾ 이는 군대가 식량 배분 우

⁴³⁾ 황진태,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농촌테제에 대한 도시주의적 분석」, 6~8쪽.

선권을 가진으로써 북한 사회의 식량부족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농업 부문에 대한 여러 가지 개혁 조치를 추진해 생산성을 증대하려고 고군분투해왔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2012년 6·28 방침, 2014년 5·30 조치, 농장법 개정이다. 또한 2019년 헌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대안의 사업체제’와 ‘농업지도체제’를 폐지하고,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새로운 국가경제관리방법으로 천명했다. 북한의 농업은 협동농장-작업반-작업분조가 기본 생산구조인 협동농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김정은 정권은 10~25명 수준이던 분조 규모를 6·28 방침에 따라 4~6명으로 축소하면서 개별화된 영농구조로 변화시켰다. 이와 함께 협동농장의 생산에 필요한 초기 비용을 국가가 보장하며, 국가와 협동농장이 일정률로 생산물을 분배하기로 하고 가격은 시장가격으로 하여 개인 소유 몫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⁴⁵⁾ 2014년 5·30 조치를 통해 협동농장에서 자율경영제를 도입하여 협동농장의 작업분조를 폐지하고 가족 단위 영농을 도입하였다. 이 조치는 농장원 1인당 농지 1,000평을 할당하여 영농하게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국가와 개인이 4:6으로 분배하기로 한 것이다.⁴⁶⁾

2009년 채택한 협동농장 관련 법령인 농장법은 김정은 정권에서 2012년과 2013년, 2014년과 2015년, 2022년에 걸쳐 총 5차례에 걸쳐 개정됐다. 2015년에는 분조관리제 조항에 포전담당책임제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노동과 실적에 따라 정확하게 현물분배를 진행하도록 하여 농장원들의 생산 열의를 높이고자 하였다. 2022년 농장법에서는 “사회주의농업기업체로서의 농장의 정의, 알곡 예상수확고의 판정, 알곡 의무수매계획의

44) 정은미, 「북한의 체제 생존력과 농촌의 역할」 『농촌사회』 제19집 1호 (2009), 50쪽.

45) 김영훈, 「김정은 정권 5년 북한농업 평가와 과제」, 4쪽.

46) 일각에서는 국가와 개인이 3:7로 분배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시달, 농장사업의 조건보장과 관련한 조항”을 개정했다.⁴⁷⁾ 김정은 정권의 농업개혁 특징은 시장의 역할을 인정해 농업을 개선하고자 했으며, 협동농장의 계획권과 조직권, 재정운영권과 판매권을 확대하여 자율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이다. 또한 포진담당책임제를 도입해 농민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현물분배를 기본으로 하면서 현금분배를 결합하는 방식을 채택해 농민들의 적극적인 생산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농업개혁 조치와 함께 북한 당국은 과학 영농 추진, 선진 농업 기술을 통한 농업의 현대화, 농업 관련 경제개발구 지정 등 관련 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김정은 정권은 집권 후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 부문의 분권화 개혁 등을 실시했으나, 농업생산의 결정적 증대로 연결되지 못했다. 핵심적인 농업개혁 조치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 증대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김정은 정권의 농업개혁이 농업생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개혁정책이 식량 증산으로 연결되지 못한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개혁을 뒷받침할 대규모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식량의 생산성 증대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자본 부족으로 인한 영농 자재 부족, 낮은 기계화 수준, 취약한 기반시설 등으로 생산성 침체와 식량부족 문제는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⁴⁸⁾ 둘째, 현재의 어려운 식량수급 상황을 볼 때 북한이 농업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개혁 조치에 따른 생산 인센티브 제공도 충분하고 지속적인 식량 공급의 증대가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개혁이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생산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지속적인 생산 증대의 선순환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⁴⁹⁾ 여기

47) 『조선중앙통신』 2022년 12월 8일.

48) 최현아·김관호, 「김정은 시대 북한 농업정책과 교류협력 방향」, 149~155쪽.

49) 김영훈, 「김정은 정권 5년 북한농업 평가와 과제」, 9~10쪽.

에 집단영농이라는 북한농업의 구조적 문제로 농민들의 노동의욕 감소와 함께 농업 부문의 개혁조치가 농촌 생산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농업생산량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결국 북한 내부 문제와 더불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와 코로나 팬데믹 상황,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는 북한 농업생산의 정체 및 하락을 촉진하고 있다. 김정은 집권 초기(2012~2014년)에는 3개년 평균 생산량이 475만 톤이었으나, 최근 3년(2019~2021년) 평균 생산은 457만 톤으로 감소해 연간 식량부족 규모가 더욱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⁵⁰⁾ 또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식량위기보고서」(2019)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1천 220만 명이 영양결핍을 겪고 있고,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 사이에 북한의 식량부족량을 약 86만 톤으로 전망하였다.⁵¹⁾ 이처럼 농업개혁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농업생산성은 정체되고 식량수급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 이는 도시인구를 위한 식량공급기로서 농촌 기능의 유지와 안정적인 체제 유지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김정은 정권이 ‘새 시대 농촌강령’이라는 카드를 꺼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50) <표 1> 북한의 식량 생산 및 소요량 추이(2012~2021년), 단위: 만 톤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생산량	467	480	480	451	482	470	455	461	440	469
소요량	573	575	578	581	584	586	589	592	595	597

출처: ① 농촌진흥청, 북한 식량작물 작황 추정에 관한 보도자료(각년도)와 ② 2020/2021년도 북한 식량소요량 추정(FAO GIEWS Update, 14 June 2021)을 기준으로 각년도 소요량을 당해연도 인구에 비례해 산출. 김영훈, 「이상기후와 북한농업, 그리고 협력과제」 『KREI 북한농업동향』 제24권 제2호 (2022), 3쪽.

51) FAO, 『Update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ood Supply and Demand Outlook in 2020/21(November/October)』, 14 June 2021.

IV. '새 시대 농촌강령'의 내용과 특징

집권 10년을 맞이한 김정은 정권은 식량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농업개혁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농업 생산성은 향상되지 못하고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는 확대되고 있어 농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김정은 정권은 2021년 말에 열린 전원회의에서 농민·농업·농촌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하는 '새 시대 농촌강령'을 채택함과 동시에 농업 투자 및 농촌 지원 확대, 협동농장에 대한 각종 특혜조치를 발표했다. 김정은은 「우리식 사회주의농촌발전의 위대한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라는 보고를 통해 “농촌을 주체사상화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만드는 것”과 “농업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 제고, 농업생산력의 비약적 발전, 농촌생활환경의 근본적인 개변”이 현시기 북한 농촌발전의 목표라고 천명했다.⁵²⁾ 또한 새로운 농촌건설을 위한 당면한 전략으로 농민의 개조, 식량문제의 해결, 농촌 생활환경의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2022년 9월에는 '사회주의농촌발전법'을 제정해 '새 시대 농촌강령'의 사상과 내용을 법적으로 밝혔다. '새 시대 농촌강령'의 구체적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농민의 지식형 근로자화

김정은 정권은 '새 시대 농촌강령'에서 농민을 “농촌혁명의 담당자, 주인으로 만드는 것”이 사회주의 농촌건설을 위한 “가장 주된 과업”이라고 밝혔다.⁵³⁾ 사회주의농촌발전법 제3조에서는 “농촌에서 3대혁명을 힘있

52) 『로동신문』 2022년 1월 1일.

게 벌려 모든 농업근로자들을 혁명화, 주체사상화하고 지식형의 근로자”로 키울 것을 규정했다.⁵⁴⁾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3대 혁명을 추진해 농민들을 정치사상, 기술지식, 문화생활 측면에서 개조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새 시대 농촌을 건설하려면 농민들이 먼저 문명하게 변화해야 농촌발전의 주력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3대 혁명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민들이 농촌혁명의 주인, 애국적인 농업근로자가 되려면 무엇보다 사상혁명을 통해 농민들 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을 개조하고 정치의식을 높여야 한다. 현재 북한 농촌은 농민들의 세대교체와 함께 의식과 환경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이러한 농촌의 현실을 반영해 농민들 속에서 5대 교양을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전쟁 시기와 전후 복구 시기, 천리마 시기의 농민영웅과 애국농민의 정신을 따라 배우는 교양사업을 추진해 새세대 농민들이 이전 세대 농민들의 정신을 본받도록 해야 한다. 사상혁명을 강화해 농민들이 국가와 제도에 대한 고마움, 집단주의 정신, 성실한 노동과 높은 계급의식을 지니도록 교양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상교양에 대한 강조와 주체형의 공산주의 인간 만들기는 김일성 정권 이후 지속해온 정책으로 ‘새 시대 농촌강령’에서 새롭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다.

둘째, 김정은 정권은 ‘새 시대 농촌강령’에서 기술혁명을 통해 농민을 현대적 과학기술로 무장한 ‘지식형의 근로자’로 만들자고 강조했다.⁵⁵⁾ 농촌발전은 생산성의 증대를 전제로 하며, 농업생산의 획기적인 장성은 농민들의 기술지식 수준에 따라 좌우된다. 농민들 속에 만연한 낡은 경험에 매달려 과학기술을 멀리하는 현상을 극복하고, 높은 과학기술을 가져

53) 『로동신문』 2022년 1월 1일.

54) 『로동신문』 2022년 10월 29일.

55) 『로동신문』 2022년 1월 30일.

야만 농민이 농촌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정책에 따라 농민들에게 농업 과학기술을 교육하고,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농민들을 배치해 전반적인 기술지식 수준을 높여야 한다. 모든 협동농장에 과학기술보급거점을 잘 조직, 활용하여 농민들이 선진 과학기술을 접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새 세대 농민들의 지식과 기술 역량을 높이도록 모든 조직이 도와야 하며, 다양한 학습경연과 경험발표회를 진행해 학습 열의를 높이도록 한다. 다음으로 농촌에 대학졸업생을 많이 배치하여 그들을 중심으로 농장의 기술력을 증대해야 한다. 이는 청년들의 농촌 탄원 열풍과 그 맥을 같이한다.

셋째, 문화혁명을 통해 농민들의 문화의식수준을 높이고 농촌에 건전하고 문명한 생활기풍을 확립해야 한다. 농민들 속에 남아있는 “뒤떨어진 문화수준, 되는대로 생활하는 뿌리깊은 인습”이 현대적이고 문명한 농촌건설에 큰 장애요인이므로, 농민들을 “문명한 농촌의 주인”으로 만들자는 주장이다.⁵⁶⁾ 이를 위해 농민들은 생활습관의 변화를 비롯해 위생 문화적인 생활, 단정한 옷차림과 머리단장, 알뜰한 살림살이, 깨끗한 집 꾸리기 등을 실천해야 한다. 또한 농민들은 군중문화예술 및 대중체육 활동도 활발히 해서 문명한 농촌을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촌의 교육과 의료수준을 높이는 것은 물론 평양과 노동계급의 문화, 삼지연시의 문화를 농촌에 전파해 농촌의 문화혁명을 추동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농민들에게 발전된 문명을 체득시키는 계기가 되어 농촌발전의 주체가 되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새 시대 농촌강령’ 발표 후 북한 노동신문은 전국 농촌에서 농민들을 ‘지식형의 근로자’로 준비시키는 모범사례를 연일 보도하고 있다. 룡천군

56) 『로동신문』 2022년 1월 30일.

장산농장은 농민들을 월, 주별 과학기술 학습계획을 세워 농업과학기술로 학습시키고 있으며, 와우도구역 남새공장은 농민들을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시켜 선진적인 과학농법을 습득하게 한다는 내용이다.⁵⁷⁾ 배천군 화산농장의 평범한 농민 10여 명이 김제원해주농업대학, 연백기술대학, 배천농업대학의 원격교육학부에 입학해 지식형 근로자로 성장하고 있다는 기사도 있다.⁵⁸⁾ ‘새 시대 농촌강령’이 강조하는 농민의 ‘지식형 근로자화’는 농촌현실과 농촌개혁정책의 간극을 극복하고, 기술혁명을 통해 농민을 추동하여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정권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김정은 정권의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농민의 ‘지식형 근로자화’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창출한 새로운 농민관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혁명을 통한 영농방법을 중점적으로 강조한 2014년 김정은의 노작과 달리 3대 혁명을 골고루 강조하며, ‘지식형 근로자화’라는 새로운 농민관을 내세운 점이 ‘새 시대 농촌강령’의 핵심 내용이다.

2. 과학기술에 기반한 농업생산력 증대와 식량문제 해결

김정은 정권은 ‘새 시대 농촌강령’에서 농업생산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농촌문제 해결에서 현시기 절박하게 나서는 중요한 과업”으로 제시했다.⁵⁹⁾ 농업생산을 발전시키는 문제는 “국가의 존망과 사회의 안정”을 좌우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북한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절실한 과제라고 밝혔다.⁶⁰⁾ 농업생산이 증대해야만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제공할 수 있고 경제 전반의 발전을 추진할 수 있으며 농촌을 ‘부유한

57) 『로동신문』 2022년 9월 15일.

58) 『로동신문』 2022년 9월 2일.

59) 『로동신문』 2022년 1월 1일.

60) 『로동신문』 2022년 8월 3일.

사회주의 이상촌'으로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농업생산력 향상을 위해서는 과학농사제일주의 방침에 따라 과학기술을 농업발전의 주된 동력으로 삼아 선진적인 농업으로 전환해 농업생산의 안정적, 지속적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종자혁명의 추진, 재해성 이상기후에 대처할 수 있는 과학적인 농사체계와 방법의 확립이 중요하다. 벼와 밀 농사 중심의 곡물생산구조를 추진하고 전국적인 콩과 감자농사 열풍 고조시켜야 한다. 또한 정보당 수확고 향상과 저수확지 농사의 증대, 축산과 과수, 채소와 공예작물 생산의 발전 등으로 농업생산을 비약적으로 증대해야 한다. 둘째, 농업 부문의 과학기술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적 농업발전의 추세에 걸맞게 농업생산의 과학화·정보화·집약화를 실현하려면 농업연구기관과 농업부문 대학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농업의 기계화에 필요한 영농기술과 방법의 연구가 절실하다. 농업과학연구기지를 첨단화하고 농업기술인재를 양성하도록 한다. 농장-작업반-농장원에게 선진과학기술과 영농방법을 적시에 보급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농업생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도와 관리를 개선해야 한다. 농업생산 전반에 대한 통일적, 계획적, 과학기술적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며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위주로 하는 '우리식 농업지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농촌경리의 수리화·기계화·화학화·전기화를 실현시켜 농업생산을 증대해야 한다. 어떤 자연재해에도 상관없이 안전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관개체계를 정비·보강하고, 농촌에 비료와 농약, 현대적 농업기계들을 충분히 공급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김정은 위원장은 어려운 형편에서 협동농장이 경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협동농장의 채무를 탕감하는 특혜 조치를 선포해 협동농장의 경영조건을 개선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농민들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조치는 열악한 현실의 농민들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농민들

의 생산 의욕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3. 도농 간 격차 해소와 농촌의 문명화

김정은 위원장은 ‘새 시대 농촌강령’에서 농촌의 면모와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을 농촌건설의 “최중대 과업”으로 제시하며, 전국의 모든 농촌마을을 삼지연시 농촌마을 수준으로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 이상촌”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⁶¹⁾ ‘사회주의농촌발전법’ 제6조를 통해 농촌마을을 “모든 면에서 월등한 사회주의 이상촌”으로 건설하도록 규제하고 있다.⁶²⁾ 또한 북한의 도농 간 격차를 인정하고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없애지 않고서는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부흥을 이룩할 수 없으며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결정적으로 없애려는 것은 우리 당의 결심”이라고 언급했다.⁶³⁾ 결국 ‘새 시대 농촌강령’의 실현은 그동안 저발전 상태에 있던 농촌과 지방의 변화이며, 북한 경제의 모든 분야가 함께 발전하는 과정이다. 농업생산의 과학화, 정보화, 집약화 실현과 농촌경리의 수리화, 기계화, 화학화, 전기화 수준을 발전시키는 것도 기계공업과 화학공업, 전력공업을 비롯한 여러 공업을 발전시켜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농촌에 현대적이고 문화적인 살림집, 탁아소와 유치원, 병원과 진료소, 학교를 비롯한 주택과 보건 및 교육시설을 건설하는 과정은 건재와 의료기구공업을 비롯한 여러 산업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가 없어져야 북한 사회주의 건설의 부흥이 이루어진다는 주장이다.

‘새 시대 농촌강령’에서 제시하는 농촌의 면모와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

61) 『로동신문』 2022년 1월 1일.

62) 『로동신문』 2022년 10월 29일.

63) 『로동신문』 2022년 8월 30일.

한 구체적 방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시와 군은 농촌건설에 필요한 시멘트를 우선 공급하며, 설계와 건설 역량을 강화하고 건설장비를 구축해야 한다. 무엇보다 농촌 살림집 건설을 선차적으로 추진하며, 국가 차원에서 강력한 지도체계를 수립하여 주요 자재와 마감재를 국가와 지방이 책임지도록 한다. 둘째, 농촌의 문명화는 농촌의 교육, 의료수준이 도시와 비슷해질 때 가능하므로 농촌의 교육과 의료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수도 평양의 문화, 노동계급의 문화, 시대의 본보기인 삼지연시의 문화 등을 지방과 농촌에 끊임없이 전파, 확대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 더 나아가 농민들이 선진문명과 접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특히 시와 군은 농촌을 삼지연시 농촌마을 수준으로, 사회주의 이상촌으로 만들기 위해 자기 지역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현대문명을 반영하여 건설해야 한다.⁶⁴⁾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이후 건설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왔다. 대규모 건설 사업은 짧은 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어 주민들의 지지를 얻어 정권을 안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려명거리, 미래과학자거리, 송화거리 등을 비롯해 평양시 개발에 주력해 왔다. 또한 김정은 정권의 정통성과 관련된 삼지연시 건설은 김정은이 2016년 삼지연군을 현지도하면서 '혁명의 성지'답게 현대적으로 만들 것을 지시한 이후 '삼지연시 꾸리기' 사업으로 시작됐다. 북한은 2019년 12월 2단계 공사 완료 후 삼지연군을 삼지연시로 승격하고, 2020년 1월에는 동과 거리 이름을 김일성의 항일투쟁을 연상하는 이름으로 개칭했다. 2021년 공사를 완료했으며, 노동신문은 삼지연시를 혁명의 성지답게 "산간문화도시의 본보기, 농촌진흥의 표준, 이상적인 본보기 지방도시로 전변"시켰다고 보도했다.⁶⁵⁾

64) 『로동신문』 2022년 8월 30일.

북한은 ‘새 시대 농촌강령’을 통해 전국의 모든 농촌을 삼지연시처럼 변모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는 김정은 정권이 삼지연시를 모델로 농촌과 지방의 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을 뜻한다. 전국의 농촌을 지방의 특색에 맞게 독립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제8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 즉 지방과 도시 경제의 균형적·동시적 발전을 이루겠다고 천명하며, 농촌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 하나가 삼지연시의 전국화를 통해 주민들이 문명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모든 농촌을 동시에 변화시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비용이 많이 들고 도시 하나를 짓는 데 들어가는 건설자재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런 난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제8차 당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기본 주제를 ‘자력갱생, 자급자족’으로 정하고, 모든 원료의 국산화를 강조한 것을 보면 대규모 건설을 실현할 수 있는 데에는 자력갱생이라는 북한의 경제시스템이 바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질적인 개발 주체를 중앙정부가 아닌 시·군 인민위원회에 위임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건재의 국산화, 재자원화와 관련한 ‘각도 건재전시회 2022’를 열었다고 보도했다.⁶⁵⁾

이처럼 김정은 정권이 전국의 농촌을 변모시키겠다는 높은 목표는 삼지연시의 경험에서 온 자신감과 함께 지역 차원에서 자력갱생을 통해 건설을 추진하라는 의도로 여겨진다. ‘새 시대 농촌강령’ 발표 첫해인 2022년 북한 정권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은 농촌 살림집 건설로 보인다. 살림집 건설 현황을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하고 어느 도와 시,

65) 『노동신문』 2021년 12월 9일.

66) 노동신문은 <<지방건설, 농촌건설을 우리의 건재로!>>라는 주제로 ‘각도 건재전시회-2022’를 개최했다고 보도했다. “새시대 농촌건설강령을 받들고 각 도에서 건재생산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교류하며 지방건설, 농촌건설을 적극 추진할 목적으로 진행되게 된다.” 『노동신문』 2022년 12월 2일.

군이 앞서가고 있는지 비교해서 선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평양시가 앞장서서 농촌 살림집을 건설하고 있으며, 타일과 색기와 등 마감재 생산능력을 2배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내용이다.⁶⁷⁾ 또한 노동신문은 교육 부문에서 중앙과 지방, 도시와 농촌의 교육 수준 차이를 줄이기 위한 사업의 사례를 자주 보도하고 있다. 농촌 및 산간 지역 학교의 교육을 도시학교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 도시의 우수한 교원들이 농촌학교에 나가 그 학교 교원들의 자질 향상을 돕고 있다는 기사도 자주 나오고 있다.⁶⁸⁾

4. ‘새 시대 농촌강령’의 특징

지금까지 2021년 발표된 ‘새 시대 농촌강령’의 추진 배경과 내용을 탐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964년 선포된 ‘사회주의 농촌테제’와의 비교를 통해 ‘새 시대 농촌강령’이 지닌 특징을 농민·농업·농촌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쟁점을 도출하기 위해 먼저 ‘사회주의 농촌테제’와 ‘새 시대 농촌강령’이 발표된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았다.

1964년 ‘사회주의 농촌테제’는 토지개혁(1946년)과 농업집단화(1958년) 완료를 통한 ‘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바탕으로 농촌문제의 장기적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강령적 방침이다.⁶⁹⁾ 조상 대대로 땅을 가져본 적이 없는 가난한 농민들은 해방 직후 실시된 토지개혁에 따라 자신의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다. 토지에 대한 열망은 공산당에 대한 지지로 나타났으며, 농민은 사회주의 혁명의 주체세력으로 거듭났다. 하지만 3년 동안의

67) 『로동신문』 2022년 9월 8일.

68) 『로동신문』 2022년 7월 14일.

69) 김연철, 「농촌테제 30주년을 통해 본 북한의 농정」 『통일한국』 제124권 (1994), 65쪽.

전쟁은 북한의 산업기반을 붕괴시켰으며, 농업생산의 피해도 매우 컸다. 전쟁의 황폐함에서 벗어나려는 북한 주민들의 열망으로 1956년까지 경제복구 건설을 마친 북한은 본격적인 사회주의 건설에 나섰다. 농민들은 전쟁 피해로 부족한 노동력과 농기구 등을 함께 이용하며 생존을 위해 농업을 점차 협동화해갔다. 이러한 전개 속에서 농민들이 소유한 토지는 농업협동화 조치를 통해 집단 소유로 전환되었다. 김일성 정권은 급진적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자는 집단적 운동으로 천리마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이로 인해 북한 공업을 비롯한 농업의 생산성은 향상했다. 하지만 혁명적 열정에 의존한 생산성 발전은 지속되기 어려웠으며, 전쟁과 전후 복구 과정의 고단함과 천리마운동을 통한 급진적 사회주의 건설의 후유증으로 농민들의 기세는 올라가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농민들의 다양한 일탈행위는 본격적으로 사회주의를 추진하려는 북한 정권의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급속한 공업 생산력의 발전과 그에 따른 노동자들의 혁명적 열정과 대조된 현상이다. 이에 김일성 정권은 농민들이 사회주의 혁명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주의 농촌테제’를 농촌정책의 강령으로 선포했다. 김일성 정권은 농촌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계속하기 위해 사상·기술·문화혁명을 추진하여 노동자와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고, 협동조합적 소유를 전 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킴으로써 생산력 발전을 추동하여 농촌 현실과 사회주의 이상과의 괴리를 극복하는 것이 ‘사회주의 농촌테제’의 목표였다.

2012년 집권한 김정은 정권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통치전략으로 제시하면서 다양한 경제개혁 조치를 추진하며 식량생산 증대를 추구해왔다. 협동농장의 자율권을 인정하고 포전담당책임제를 도입해 농민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현물분배를 결합하는 방식을 채택해 농민들의 혁명적 생산활동을 유도하였다. 하지만 대내외적 환경의 영향으로 도·농간 생활 격차는 점차 심화되고, 농민들의 생활은 여전히 궁핍하였다. 북한은

2018년 미국,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해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했지만, 2019년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국제사회 제재 장기화를 기정사실화하고, 제8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을 결정하였다. 당규약 개정을 통해 북한의 당면과제를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사회 건설'로 규정하였다. 김정은 정권은 과제실현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산업 간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 운영방식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제발전의 토대를 구축한다. 둘째, 지역 간, 도·농간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기 위해 시, 군 강화노선을 전면화한다.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2021년 12월 열린 조선노동당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새 시대 농촌강령'을 선포해 농촌의 장기발전 전략을 제시하였다.⁷⁰⁾ 또한 '새 시대 농촌강령'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2022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사회주의농촌발전법'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두 강령의 시대적 배경과 목표, 내용의 비교를 통해 '새 시대 농촌강령'의 특징을 농민, 농업, 농촌 측면으로 분석했다. 먼저 농민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사회주의 농촌테제'가 추구한 농민은 노동계급화를 통한 '사회주의 근로자'였다면, '새 시대 농촌강령'에서는 농민의 '지식형 근로자화'를 제시하고 있다. 김일성 주석의 '사회주의 농촌테제'는 농촌에 사회주의 제도를 공고히 하고, 농업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키며 노동자와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점차 없애는 것으로 설정하였다.⁷¹⁾ 3대 혁명을 통해 노동자와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고 농민을 '사회주의 근로자'로, 전 사회의 '노동계급화'로 사회주의 건설을 앞당기는 것이 '사회주의 농촌테제'의 목표였다. 반면 '새 시대 농촌강령'에 제시된 김정은 정권이 바라는 농민은 선진적인 과학기술로 무장한 '지식형 근로자'이다. 농민의

70) 최은주, 「김정은 시대 북한의 장기 발전 구상의 등장 의미와 시사점」, 224~225쪽.

71) 김일성,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1964년 2월 25일)」, 197쪽.

노동계급화라는 이전 시대의 농민관에서 변화한 점이 새로운 농촌강령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김정은 정권도 이전 시대와 마찬가지로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통해 농민에게 “참된 농민혁명이, 애국적인 농업근로자”가 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⁷²⁾

김정은 집권 10년을 맞이한 현시점에서 농민관 변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김일성 정권은 1964년 ‘사회주의 농촌테제’를 통해 혁명유가족, 피살자 가족, 노동자를 농촌에 배치하여 계급진지를 구축하고 농민의 정치사상의식을 강화하는 가운데 3대 혁명을 철저히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노동자와 농민 사이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 농민의 노동계급화를 이루고자 했다.⁷³⁾ 반면 김정은 정권은 ‘새 시대 농촌강령’을 통해 농촌에 대학졸업생을 많이 배치하여 그들의 핵심적 역할에 의지해 농장의 기술력을 증대시켜 농민의 ‘지식형 근로자화’를 꾀하고 있다. 김일성 주석의 ‘사회주의 농촌테제’에서는 농민들의 지식을 초중 졸업 수준으로 높이면서 농민들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없애 그들을 공산주의로 무장시키는 것을 과업으로 하였다.⁷⁴⁾ 반면 ‘새 시대 농촌강령’에서는 전민과학기술인재화 방침에 따른 새 세대 농민의 지식기술 역량과 함께 농민들이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통해 대학 졸업자 수준의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농업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사회주의 농촌테제’에서는 3대 혁명으로 무장한 농민들의 노동력 중심 생산성 증대를 강조했다. 반면 ‘새 시대 농촌강령’은 과학기술 중심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주장하고 있다. 1964년 ‘사회주의 농촌테제’는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를 추진할 때는

72) 『로동신문』 2022년 8월 30일.

73) 정진아, 「북한 사회주의 농촌테제의 등장 배경」, 237~238쪽.

74) 홍달선, 「우리나라 농촌에서 협동화와 기술, 문화혁명」 『근로자』 제175호 (1960), 42쪽.

농민의 혁명적 열기가 고조된 반면,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추진하면서부터 왜 농민들의 열정이 저조한가?라는 고민의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⁷⁵⁾ 따라서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추진해 농민의 혁명적 열정을 되살리고, 농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공업 수준으로 올려 농업생산성을 발전시키고자 했다. 사회주의 사상과 집단주의 정신으로 무장한 농민들의 노동력 중심의 생산력 향상이다. 한편 '새 시대 농촌강령'은 지식으로 무장한 농민이 주체가 되어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비약적인 생산발전을 이룩해 북한의 식량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이다. 물론 이전 시대 농민영웅의 정신으로 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기술혁명을 통해 지식형의 근로자로 거듭나 과학기술을 주된 동력으로 농업생산성을 발전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농촌 측면의 특징이다. '사회주의 농촌테제'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선진적인 도시가 낙후된 농촌을 지원해야 함을 강조했다. 반면 '새 시대 농촌강령'은 도농 간 차이를 줄여 전 사회의 균형적, 동시적 발전을 주장하고 있다. 1964년 당시 북한은 농업과 공업 간 격차가 공간상으로 농촌과 도시로 나뉘어 뚜렷하게 나타나는 상황이었다. 이에 '사회주의 농촌테제'에서는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선진적인 도시가 농촌을 지원하여야만 뒤떨어진 농촌을 도시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라면서⁷⁶⁾ 농촌에 대한 도시의 역할을 강조했다. 물론 도시주민과 공업 발전을 위한 농촌의 기능인 식량기지의 중요성도 중시해 농촌보다 도시를 우선하는 공간적 선택성도 발견된다.⁷⁷⁾ 한편 2021년 '새 시대 농촌강령'에서는 농촌을 문명화·도시화하여 사회주의 이상촌을 건설해 도농 간 차이를 없애 전 사회의 균형적, 동시적 발전을 실현하

75) 정진아, 「북한 사회주의 농촌테제의 등장 배경」, 243~244쪽.

76) 김일성,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1964년 2월 25일)」, 204쪽.

77) 황진태,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농촌테제에 대한 도시주의적 분석」, 3쪽.

자고 제시하였다. ‘우리 식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하려면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켜야 하며, 그 출발점으로 농촌지역의 개발 사업을 추진하자는 주장이다.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촌건설 정책으로 확대하여 향후 10년 동안 발전시킬 방향을 제시하였다.⁷⁸⁾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없애지 않고서는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부흥을 이룩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2021년 SDGs VNR보고서에서 도시와 농촌 간에 격차가 있음을 밝히고, 격차 감소를 위해 도시의 농촌 지원 역할을 강조한 것과 연장선상이다. 그만큼 도시와 농촌 간 격차가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농민들의 불만과 저항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2014년 발표한 노작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도농 간 격차의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과 농촌의 도시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⁷⁹⁾ 하지만 제8차 당대회의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 노선에 따라 ‘새 시대 농촌강령’에서는 전체 도시와 농촌의 동시적, 균형적 발전을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 농촌정책의 강령적 지침은 시대적 조건과 정권의 요구에 따라 농촌건설 주체인 농민, 산업으로서의 농업, 도시와의 관계에서 농촌정책은 변천을 거듭해 왔다. 그동안 북한 농촌정책의 강령적 역할을 해온 ‘사회주의 농촌테제’가 선포된 지 57년 만에 새로운 농촌강령으로 ‘새 시대 농촌강령’이 채택되었다. 지금까지 분석한 배경과 내용, 특징을 바탕으로 1964년 김일성 주석의 ‘사회주의 농촌테제’와 2021년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새 시대 농촌강령’을 <표 2>에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78) 최은주, 「김정은 시대 북한의 장기 발전 구상의 등장 의미와 시사점」, 225~226쪽.

79) 김정은 위원장이 2014년 노작에서 농민들의 “문화기술수준이 비할 바 없이 낮아지고 농촌마을들이 사회주의 문화농촌으로 일신되어 문화생활조건에서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가 훨씬 줄어들었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사회주의농촌테제의 기치를 높이 들고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2014년 2월 6일)』, 4쪽.

<표 2> 북한의 '사회주의 농촌테제'와 '새 시대 농촌강령' 비교

주요 내용	사회주의 농촌테제 (1964년)	새 시대 농촌강령 (2021년)
시대적 배경	· 1958년 농업협동화 완료와 1950년대 중후반 천리마운동이라는 고도의 산업화 전략의 후유증으로 농민들의 혁명적 열정과 생산성 향상이 저하된 시기	· 2000년 이후 20여 년의 시장화 진전과 함께 2012년 6·28 방침, 2014년 5·30 조치를 통해 사회주의기업책임제, 포전담당책임제 등의 경제개혁이 추진되던 시기
목표	· 노동자와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고, 협동조합적 소유를 전 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킴으로써 생산력 발전을 추동하여 농촌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계속하기 위함	· 농촌을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만드는 것과 농업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 제고, 농업생산력의 비약적 발전, 농촌생활환경의 근본적인 개편을 통해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
농민	· 사회주의 근로자 · 농민의 노동계급화 · 혁명가 유가족, 피살자 가족, 노동자를 농촌에 배치해 계급진지를 강화하고 농민의 정치사상의식을 강화 · 농민의 지식을 초중 졸업 수준으로 향상	· 지식형 근로자 · 애국적인 농업근로자 · 대학 졸업생을 농촌에 배치하여 농장의 기술력을 증대하고 지식형 농민을 만들고자 함 · 전민과학기술인재화 방침에 따라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 등을 통해 농민역량을 대학 졸업자 수준으로 향상
농업	· 사회주의 사상과 집단주의 정신으로 무장한 농민들의 노동력 중심 생산성 증대 · 농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공업 수준으로 올려 농업 생산성 향상	· 과학기술 중심의 농업 생산성 증대 · 지식으로 무장한 농민이 주체가 되어 과학기술 중심 생산을 할 때 생산의 비약적 발전을 이룩해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
농촌	· 농촌의 도시화 · 도농 간 차이를 인정하고 소유형태, 관리방법의 낙후성을 원인으로 제시 · 농민에 대한 노동계급의 지도 · 농업에 대한 공업의 도움 ·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강조	·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전략에 따라 도시와 지방의 균형적·동시적 발전 · 농촌의 문명화·도시화 · 도농 간 차이의 심각성, 도시의 농촌 지원 강조 ·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적 지원과 지위체계 강조 · 지방 자체적으로 건재생산기지 구축

출처: 저자 작성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21년 12월 말 김정은 정권이 채택한 ‘새 시대 농촌강령’의 추진 배경과 내용,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새 시대 농촌강령’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조선노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결론에서는 집권 2기의 김정은 정권이 추진하는 ‘새 시대 농촌강령’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새로운 강령에 따른 북한 농촌의 변화를 전망하는 것으로 본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김정은 정권의 ‘새 시대 농촌강령’은 무엇을 향해 가는 것일까? 그동안 북한 농촌정책의 최고 지침으로 작용해온 ‘사회주의 농촌테제’는 2000년대 이후 농촌개혁의 추진으로 점차 사문화의 길을 걸었다. 북한 정권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극심한 식량난을 겪으면서 농업생산 증대를 위한 새로운 농촌개혁을 추진해왔다. 물론 ‘사회주의 농촌테제’는 김일성의 교시라 폐기는 불가능하므로 김정은 정권이 추진한 농촌개혁은 ‘사회주의 농촌테제’를 발췌 적용하는 방식으로 정당화해 왔다.⁸⁰⁾ 김정은 정권이 추진해온 농촌개혁은 궁극적으로 식량 증산을 목표로 한다. 분조관리제 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를 중심으로 한 생산방식의 변화, 농장책임관리제와 농장법을 통한 농민의 생산의욕을 고려한 분배방식의 변화, 협동농장에 권한이 더 확대된 분권화와 자율성 강화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조치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제8차 당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목표가 모든 부문에서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실패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인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경제문제부터 해결해야 함을 강조했다.⁸¹⁾ 특히 당규약 개정에서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삭제하고, ‘인민

⁸⁰⁾ 임수호, 「북한의 새로운 농촌강령과 농촌테제의 부활」, 2쪽.

대중 제일주의 정치'를 성문화했다.⁸²⁾ 또한 제8차 당대회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행로'에 이정표가 될 대회라고 규정했다. 이는 김정은 정권의 새로운 통치노선의 선포이며, 모든 산업 부문의 고른 발전과 전체 지역의 균형적, 동시적 발전을 이루겠다는 김정은 정권의 의지의 표현이다.

이처럼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실패를 인정하고 2021년부터 새로운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의 고민은 클 수밖에 없다. 내부적으로 경제개혁 노력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지만, 경제제재와 북미관계 정상화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공적인 경제개혁에 따른 경제발전과 식량문제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결정적 방안인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 시대 농촌강령'을 채택했다고 판단된다. 물론 '새 시대 농촌강령'은 집권 10년을 넘긴 김정은 정권의 새로운 통치노선, 즉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노선을 실현하기 위한 하위 실천전략의 성격을 지닌다.

2021년 김정은 정권은 '사회주의 전면적, 균형적, 동시적 발전'을 선언하고 이를 통해 '부흥강국'을 실현하겠다는 장기적인 국가발전구상을 제시했다. 김정은 집권 후 전개해 온 경제개혁정책을 지속하면서, 새로운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성과를 전제로 향후 15년 내외에 사회주의 강국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하고 있다.⁸³⁾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시·군 강화사업과 농촌발전전략이 성공해야 한다. 결국 '새 시대 농촌강령'이 빛나는 성과를 이룩해야만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부흥, 전면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⁸⁴⁾ 이것은 1978년부터 강력하

81) 『로동신문』 2021년 1월 13일.

82) 『로동신문』 2021년 1월 10일.

83) 최은주, 「김정은 시대 북한의 장기 발전 구상의 등장 의미와 시사점」, 205쪽.

84) 『로동신문』 2022년 8월 30일.

개혁·개방을 추진해 온 중국이 2006년부터 농민과 도시주민 전체가 경제성장의 성과를 공평하게 누리는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할 목표로 ‘신농촌건설’을 추진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여겨진다. 20여 년 가까이 개혁·개방을 추진해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도·농간 소득격차는 점차 커지고 식량생산도 정체된 상황에서 농민, 농업, 농촌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중국이 ‘신농촌건설’을 추진한 것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새로운 국가발전구상은 2018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재집권화, 보수화를 추진하는 상황과도 연관이 있다. 경제개혁의 성과가 미미한 상황에서 장기적 국가발전구상과 자력갱생, 정면돌파전이라는 전략으로 김정은 정권은 앞으로의 10년, 20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구상 속에서 ‘새 시대 농촌강령’은 전체 지역의 균등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하위 실천전략으로 자리한다. 도농간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주의 이상촌을 건설하는 것은 전면적, 균형적, 동시적 발전이라는 장기적 국가발전구상을 지향하고 있다. 강력한 경제제재와 팬데믹 상황에서 부족한 재원을 농업을 포함한 전략부문에 효율적으로 집중시키려는 의도로 여겨진다.⁸⁵⁾ 북한에서 식량문제는 체제의 안전이 걸린 중대한 문제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을 것이다. 시장화와 경제개혁의 결과로 지방과 협동농장 단위들이 자력갱생하는 조건과 농촌마을의 본보기로 삼지연시의 성과가 ‘새 시대 농촌강령’의 추진을 촉진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렇다면 ‘새 시대 농촌강령’은 성공할 수 있을까? 북한은 “2022년은 사회주의농촌의 새로운 발전이 시작되는 첫해”라고 강조하며,⁸⁶⁾ 다양한 후

85) 임수호, 「북한의 새로운 농촌강령과 농촌체제의 부활」, 6쪽.

86) 『로동신문』 2022년 3월 5일.

속 조치를 통해 강령을 전개하고 있다. 2022년 1월에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9차 대회를 열어 전체 농민들에게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라는 구호를 내걸고 ‘부흥강국’ 실현을 외치고 있다.⁸⁷⁾ 무엇보다 2022년 9월 7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사회주의농촌발전법’을 채택했다. 이것은 ‘새 시대 농촌강령’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입법화이다. 노동신문은 이 법안이 북한의 “전반적 발전을 이룩하는데서 실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며,⁸⁸⁾ 법안을 철저히 지켜 ‘새 시대 농촌강령’의 목표를 실현하자고 촉구하고 있다.

‘새 시대 농촌강령’이 추구하는 목표인 농민의 지식형 근로자로의 개조, 농업의 식량문제 해결, 농촌 생활환경의 개선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먼저 과학기술로 무장한 지식형 농민, 과학기술에 기반한 식량 증산은 쉽지 않아 보인다. 대다수 농민들은 지식과 정보에 접근하는 능력이 낮고,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도 국가의 막대한 투자 없이 농촌현장에 추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고된 노동과 생계로 허덕이는 농민들에게 과학기술은 거리감이 먼 구호일 뿐이다. 현실에서 과학기술은 과학·기술자의 문제이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는 주로 초중고생과 대학생들이 대상이기 때문이다.⁸⁹⁾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 등 원격교육은 주로 특급기업소 및 대형기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모든 협동농장의 농민에게는 과학기술에 대한 접근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다. 다음으로 식량문제의 해결, 농촌 생활환경의 개선의 목표 달성은 현재의 경영관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협동농장의 개혁을 보다 심화할 필요가 있다.⁹⁰⁾

87) 『로동신문』 2022년 8월 30일.

88) 『로동신문』 2022년 10월 29일.

89) 박희진, 「북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모순과 사회의 혼종」 『북한학연구』 제17권 제1호 (2021), 98쪽.

90) 정은찬, 「북한 협동농장 개혁에 대한 고찰: 협동농장 경영방식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아세아연구』 제65권 2호 (2022), 233~234쪽.

현재 가장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모든 농촌마을의 삼지연시 수준으로의 도시화, 생활환경 개선이다.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시·군 단위의 자체적 역량에 의존하는 농촌마을 개선은 현재의 북한 경제로 볼 때 어려운 과업으로 보인다. 백두산혁명정신의 성지인 삼지연시 건설은 북한 전체가 자본과 자원, 노동력을 총동원해 이루어진 성과이기 때문이다. 농촌의 교육과 보건으로 분야를 문명화하겠다는 목표도 지방 자체의 ‘자력갱생’으로는 힘들어 보인다.

북한은 앞으로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 농촌에서 개혁 조치를 계속해서 실시할 가능성이 크며, 이와 함께 ‘새 시대 농촌강령’도 지방과 농촌의 자력갱생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식량 문제 해결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단영농과 토지의 사적 소유 불인정이라는 북한농업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선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부분적인 농업개혁과 새로운 농촌강령을 추진하는 것은 식량문제와 북한 주민의 먹는 문제 해결에 돌파구가 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은 더 과감한 농촌개혁을 위해서 중국처럼 가족농 제도를 도입하고 수매제도 개혁 등을 실시해 농민들의 자발적 노동의욕과 생산열정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만 북한의 심각한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도시와 농촌이 모두 잘 사는 ‘부흥강국’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 접수: 2022년 11월 5일 / 심사: 2022년 11월 28일 / 게재 확정: 2022년 12월 1일

【참고문헌】

- 김연철, 「농촌테제 30주년을 통해 본 북한의 농정」 『통일한국』 제124권, 1994, 65~67쪽.
- 김영훈, 「김정은 정권 5년 북한농업 평가와 과제」 『KREI 북한농업동향』 제18권 1호, 2016, 3~13쪽.
- _____, 「최근 북한 식량·농업의 동향과 전망」 『KERI 북한농업동향』 제23권 3호, 2021, 3~15쪽.
- _____, 「이상기후와 북한농업, 그리고 협력과제」 『KREI 북한농업동향』 제24권 제 2호, 2022, 3~11쪽.
- 김영훈·권태진·임수경, 「북한의 농업부문 개혁조치 분석과 전망(1996~20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3, 1~146쪽.
- 김영훈·이슬아, 「코로나-19 및 기상재해와 2020년 북한의 식량·농업」 『KERI 북한농업동향』 제22권 2호, 2020, 13~24쪽.
- 김영희, 「중국과 북한의 농업집단화에 대한 비교 고찰」 『한중인문학연구』 제35집, 2012, 417~442쪽.
- 김태근, 「중국, 신농촌건설을 2006년도 1호문건으로 채택」 『세계농업』 제66권, 2006, 1~6쪽.
- 박희진, 「북한 도시-농촌의 연결공간과 파생되는 계층들」 『문화와 정치』 제7권 3호, 2020, 211~241쪽.
- _____, 「북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모순과 사회의 혼종」 『북한학연구』 제17권 제1호, 2021, 73~104쪽.
- 양문수, 「북한 8차 당대회가 북한경제 및 농업에 미치는 영향」 『KERI 북한농업동향』 제22권 제4호, 2021, 3~17쪽.
- 윤기관·왕하, 「중국 신농촌건설정책 추진과 한-중FTA체결 이후 한국농업 미래전망」 『한국무역학회 학술대회』 제4호, 2008, 63~83쪽.
- 윤무근, 「북한 유기농업의 발전과정과 특징에 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24권 제1호, 2020, 207~238쪽.
- 윤의근·허국동·이병오, 「중국의 신농촌건설과 빈곤퇴치 문제」 『강원 농업생명환경연구』 제28권 제3호, 2016, 1~9쪽.
- 이유진, 「북한의 농업개발구 선정 원인과 성공 요인 분석」 『북한연구학회보』 제19

- 권 제1호, 2013, 193~221쪽.
- 이일영, 「사회주의 집단농업의 구조와 제도개혁에 관한 비교 연구: 소련·중국·북한을 중심으로」 『농촌경제』 제17집 제4호, 1994, 101~121쪽.
- 임상철, 「김정은 시대의 북한농업정책, 그 과제와 전망」 『북한연구학회보』 제17권 제2호, 2013, 267~296쪽.
- 임수호, 「북한의 새로운 농촌강령과 농촌체제의 부활」 『이슈프리프』 제382호, 2022, 1~6쪽.
- 정은미, 「농민의 저항과 북한 농업정책의 변화: 1960년대와 1990년대의 유인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농촌사회』 제18권 1호, 2008, 189~236쪽.
- _____, 「북한의 체제 생존력과 농촌의 역할」 『농촌사회』 제19집 1호, 2009, 49~81쪽.
- _____, 「식량주권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유기농업」 『현대북한연구』 제16권 1호, 2013, 214~254쪽.
- 정은찬, 「북한 협동농장 개혁에 대한 고찰: 협동농장 경영방식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아세아연구』 제65권 2호, 2022, 209~239쪽.
- 정정현, 「북한의 협동농장 생산체제에 있어 분조관리제의 변화와 농업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협동조합경영연구』 제48집, 2018, 53~74쪽.
- 정진아, 「북한 사회주의 농촌체제의 등장 배경」 『사학연구』 제123호, 2016, 211~251쪽.
- 조수용, 「자발과 강제 사이에서: 1950년대 북한 농업협동화의 과정과 성격」 『통일과 평화』 제13권 2호, 2021, 155~197쪽.
- 조준현, 「중국의 농촌경제와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한중미래연구』 제4호, 2015, 31~60쪽.
- 채수란, 「김정은 시대 비평양지역 가계경제활동에 대한 연구: 북한이탈주민 조사를 바탕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24권 제2호, 2020, 39~74쪽.
- 최용호, 「코로나19 사태와 북한 식량수급 동향과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제195호, 2020, 1~17쪽.
- 최은주, 「김정은 시대 북한의 장기 발전 구상의 등장 의미와 시사점」 『한반도미래연구』 제7호, 2022, 205~233쪽.
- 최현아·김관호, 「김정은 시대 북한 농업정책과 교류협력 방향」 『현대북한연구』 제24권 2호, 2021, 132~161쪽.
- 한승호·김관호, 「북한 신년사(2013-2017)를 통해 본 김정은 시대의 농축수산업 분석」 『평화학연구』 제18권 1호, 2017, 109~130쪽.

황진태,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농촌테제에 대한 도시주의적 분석」 『Online Series』
CO 22-02, 2022, 1~9쪽.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4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1961년 9월 11
일)」, 『김일성저작집 1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_____,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1964년 2월 25일)」, 『김일성저
작집 1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_____, 『사회주의농촌테제의 기치높이 농촌문제의 중국적 해결을 위하여(1994년
2월 24일)』,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김정은, 『사회주의농촌테제의 기치를 높이 들고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
(2014년 2월 6일)』,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4.

홍달선, 「우리나라 농촌에서 협동화와 기술, 문화혁명」 『근로자』 제175호, 1960,
34~43쪽.

『로동신문』 2021년 1월 10일.

『로동신문』 2021년 1월 13일.

『로동신문』 2021년 12월 9일.

『로동신문』 2022년 1월 1일.

『로동신문』 2022년 1월 30일.

『로동신문』 2022년 3월 5일.

『로동신문』 2022년 7월 14일.

『로동신문』 2022년 8월 3일.

『로동신문』 2022년 8월 30일.

『로동신문』 2022년 9월 2일.

『로동신문』 2022년 9월 8일.

『로동신문』 2022년 9월 15일.

『로동신문』 2022년 10월 29일.

『로동신문』 2022년 12월 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 이행에 관한 자발적 국가 검토 보고서』,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 정부, 2021.

『조선중앙통신』 2022년 12월 8일.

FAO, 『Update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ood Supply and Demand Outlook in 2020/21(November/October)』, 14 June 2021.

Background and contents of the 'New Era Rural Program' in the Kim Jong-un era

Song, Hyeon-jin (Ewha Womans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background, content, and characteristics of the 'New Era Rural Program' adopted by the Kim Jong-un regime in 2021, based on 『Rodong Sinmun』. It intends to clarify the aims and prospects of the new rural program. The alienation and dissatisfaction of farmers due to the rural underdevelopment, and the stagnation and decline in agricultural productivity due to internal and external crises are the backgrounds for adopting the new rural program. The content of the Rural Program is to make farmers into 'knowledge-type workers' and masters of rural revolution, to increase agricultural productivity based on science and technology, to solve North Korea's food problem, and to civilize and urbanize rural areas. The characteristics discovered through comparison with the 'socialist rural thesis' are as follows. First, the peasant view of farmers as 'working-class' in the previous era has changed to 'knowledge-type workers'. Second, it has changed from labor force-centered to science and technology-centered improvement of agricultural productivity. Third, it aims to achieve equal development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beyond the level of urban support for rural areas. The 'New Era Rural Program' aims for the

‘comprehensive and balanced development of socialism’ in North Korea, and it seems difficult to achieve the goal given the current economic situation in North Korea.

Keywords: Kim Jong-un era, New era rural program, knowledge workers, rural civilization, agricultural productivity increase

송현진 (Song, Hyeon-Jin)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강사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주제는 북한의 영웅 정치, 북한 사회, 북한 여성, 북한이탈주민과 사회통합, 대북 지원 등이다. 대표 논문으로는 『북한 여성, 변화를 이끌다』, 『남과 북, 평화와 공존』, 『김정은 체제 10년, 새로운 국가 전략』, 「북한 영웅정치의 변화와 그 요인 연구: 역사적 제도주의 분석」 등이 있다.